

6월항쟁기념 학술대토론회 '한국민주주의와 87년체제'

글 · 김현구 best1357@hanmail.net
사진 · 황석선 stonesok@kdemo.or.kr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론과 각계의 시국선언, 우리는 이렇게 6월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이하였다. 많은 이들은 6월 민주항쟁과 87년을 이렇게 기억한다. '터져 나오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의 열망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승리'

우연히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현 시점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에서는 6월항쟁 22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 '한국 민주주의와 87년체제'를 개최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현 상황과 시점에서 민주주의를 정초했던 87년 체제, 그리고 이 둘을 사유하는 것은 우리에게 묘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복잡한 고민의 해법을 모색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논의들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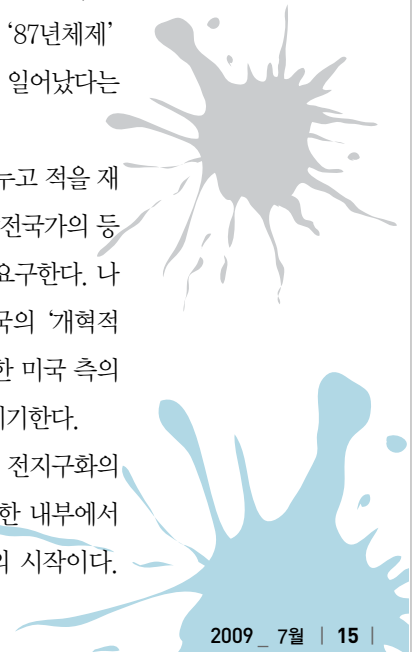
통치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87년체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일준 교수(고려대)는 <통치성을 통해본 한국 현대사: '87년 체제'와 한국의 사회구성> 라는 글을 통해 통치(성)의 관점에서 현대사를 재조명하며 87년체제론에 비판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여기서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관점이란 현실에 '군사'나 '경제' 같은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차원이 있다는 가정을 배경하고, 사회 현실에는 단일 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인 다양한 차원이 공존하며, 사회 문제는 복합적 측면을 가졌다는 점, 또 현실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어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87년체제'론은 한국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에 있어 객관적 체제가 아닌 주관적 규정이라고 비판한 후, 체제로 한국사회를 시간 축에 따라 구성하면 'system'으로서의 '48년체제' (정전체제, 분단체제)의 규정 아래 'regime'으로서의 61년체제(근대화체제, 개발독재체제)에서 97년체제(신자유주의 지구체제)로 전환했다고 본다. 이른바 '87년체제'는 어떤 새로운 전환의 축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변동이 일어났다는 것과 그때 새로운 성격을 가지는 '체제'가 성립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다.

정일준 교수는 현대사를 재조명하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안과 밖을 나누고 적을 재규정하며 국가의 당면 목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통치성의 핵심이라 할 때, 발전국가의 등장이란 '경제'가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는 과정인데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요구한다. 나아가 급속한 산업화는 이미 1950년대 준비된 인적, 제도적 기반, 쿠데타 후 미국의 '개혁적 개입', 한일관계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이라는 역사적 계기, 안보적 고려에 의한 미국 측의 자국시장 개방이 작용한 것으로 발전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존 논의에 문제를 제기한다.

다음으로는 한국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외생적 변수로서 탈냉전과 자본주의 전지구화의 영향을 살펴본다. 냉전체제의 해체와 남북관계 개선은 자본주의 국가상호 남한 내부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바뀌었다고 본다. 이는 일면 진정한 '정치'의 시작이다.



그러나 한국의 '자연된 민주화 이행과 제약된 민주주의 공고화'는 점증하는 사회정치적 긴장 속에서 정체된 채 민주주의 심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한다. 나아가 모든 정권이 미국 헤게모니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검토하고 보다 적실성 있는 대응을 고민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 현대사를 조망해 볼 때, 한국 민주주의의 성쇠는 전 지구적 탈냉전을 어떻게 한반도 수준에서 제도화시키며, 나아가 경제적 전 지구화와 구조조정이라는 도전에 잘 대처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즉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구조조정이 지니는 득실과 명암을 우리 실정에 맞게 소화, 흡수할 수 있는 통치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사회는 자유주의 통치성이 미숙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통치성으로 과속, 질주함으로써 이명박정부에서 한국의 국가는 권위주의적인 신자유주의 통치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 헤게모니 프로젝트 발진을 요청하며 마무리 한다.

'87년이 아닌' 97년체제

다음 발표자로 나선 손호철 교수(서강대)는 <'한국체제' 논쟁을 다시 생각한다: 87년 체제, 97년체제, 08년체제를 중심으로>에서 87년 민주화로 정치체제가 바뀌고 97년에 신자유주의화하면서 경제체제가 바뀌었다며 우리는 87년이 아닌 97년체제에 집중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먼저 이론적으로 '사회체제(social system)'와 '부분체제(partial regimes)'들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손호철 교수는 사회체제로서 '한국체제'는 단일한 차원이나 지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모든 사회적 관계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좀 단순화하면 '한국(정치)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이다. 이는 또 별개의 헌정체제, 노동체제, 사회운동체제, 정당체제, 젠더체제 등 다양한 하위체제들 내지 부분체제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다양한 부분체제들은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체제들(regimes)이기 때문에 '87년체제'라는 식으로 하나의 일치된 시기 구분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이를 기초로 다양한 87년체제론 중 몇 가지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먼저 하나의 총체적 사회체제로서의 87년체제, 즉 정치와 경제 두 측면에서 질적 전환이 있었고 그것이 아직도 지배적이란 관점이다. 이는 97년 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체제의 전면화란 경제체제의 질적 전환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두 가지 후속논쟁이다. 61년체제와 97년체제만이 인정하고 87년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과 97년체제 등장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87년체제의 하위체제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 역시 문제가 있는데 전자는 87년 이전과 87년 민주화 이후를 같은 체제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경제환원주의이고, 후자는 97년을 반독재 야당정권의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민주화라는 87년체제의 하위체제로 본 것은 정치주의라는 것이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87년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손호철 교수는 87년체제가 다양한 부분체제로서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설명한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보자.

우선 헌법 개정이라는 기준에 따른 '헌정체제'의 경우, 87년 체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다음으로 '노동체제'는 48년(배재적 후견주의)-61년(국가코포라티즘)-87년(과도체제)-97년(신자유주의)로 구별된다. '민주주의 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에 맞출 경우, 97년체제보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08년체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포함한 총체적 민주주의 체제로 보면 97년체제의 위상이 성립된다. 이어 '분단체제'를 살펴보면, 높은 추상성에서는 48년체제의 연장선상(후전상태)이고, 낮은 추상성에서는 2000년(평화공존적 분단)과 48년으로의 회귀인 08년체제로 대별된다는 측면에서, 08년 체제론이 가장 유효한 부분이 된다. 다음으로 '정치균열체제와 정당체제'에서는 정치균열로 볼 때 지역주의가 압도하는 87년체제가 여전히 지배적이고, 정당체제로 보면 보수지역정당독점의 87년체제에서 04년 민주노동당의 진입으로 보수지역정당우위체제로 변화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체제'에서는 45년체제(좌우 대립)-53년체제(반독재 자유주의)-80년체제(진보운동부활+반독재민주화)-90(87)년체제(자유주의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분화)-00년체제(냉전적 시민운동의 등장)-02년 체제(비조직화 대중운동-촛불) 등으로 정리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체제의 역사적 전환은 48년체제(극우반공체제)-61년체제(개발독재체제) -87년체제(민주화체제)-97년체제(신자유주의체제)로 변화되어 현재 97년체제 속에 살고 있고, 08년체제를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87년 헌정체제' 개혁의 필요성

마지막 발표자인 박명림 교수(연세대)는 <한국 민주주의 - 온 길, 선 곳, 갈길>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진단한 후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헌정체제 개혁을 시도하는 제도적 차원의 대안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박명림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탈군사화-문민화, 참여와 시민권의 확대, 민주적 게임의 룰의 확립, 권력분립 등의 성취를 이루었다고 본다. 반면에,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인 정당정치 상실, 즉 비(非)정당민주주의, 무(無)정당통치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지표로 대통령의 반복적-법치적 탈당 및 빈번한 중립내각의 구성, 정당무책임이라 할 수 있는 지배당=여당의 실종현상, 대통령-지배당 즉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일상적 갈등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현상 역시 모든 민주정부 하에서 항상 반복”되는지를 묻고 있다. 그것은 결국 진보나 보수, 개인 리더십이나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87년 헌정체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문제 지적과 해결 방안은 모두 헌정체제를 개혁하는 제도개혁으로 귀착된다.

박명림 교수가 주목하는 민주주의와 정치체제 차원에서 '87년 헌정체제'는 '이중구조'로 구성된다. 87년 헌법체제(5년 단임 대통령제)와 88년 정당체제(지역균열에 바탕한 지역 정당체제)가 그것이다. 전자는 형식을, 후자는 내용을 규정한다고 말한다. 양자의 결합은 88년 이후 반복되어 온 분점정부의 등장, 대통령과 의회갈등의 주요 요인이었고 지역정당 체제가 지닌 대표왜곡현상과 소선거구-다수대표제로 인한 다당제 촉진 현상도 이로부터 설명한다. 이어 대통령-의회 갈등 및 민주화 이후 두드러진 현상인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와 사법통치사회(juristocracy / courtocracy)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 헌법적, 제도적 차원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87년체제의 권력구조결정 과정이 상층의 '거래'와 '협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문제와 그 내용이 결국은 민정당 안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적 재심의의 당위성, 시민참여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도출해 낸다.

다음으로 한국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결과와 현실을 살펴보고 향후 대안의 방향을 잡아간다. 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외환보유고, 수출규모 모두 역대 정권 중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높았다. 이는 보수파가 공격한 '무능한 좌파'라는 공세와 어긋나는 지표들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OECD 국가들의 보편적 지평과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사적 경험으로 볼 때 사회성, 평등성, 복지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GDP 대비 낮은 공공사회비 지출 비율, 최고의 자살률, 소득분배와 빈부격차의 급격한 악화, 교육의 역근대화와 세습화,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등이 민주화 20년의 결과라는 것이다. 즉, 그간의 민주화란 섬처럼 포위된 것이었고 그 결과 이미 보수적이고 과도적인 경제사회영역 위에 등장한 보수정부로 인해 모든 영역에서 일거의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민주주의와 현 정부 모두에 큰 위협이 될 것임을 충고한다.

박명림 교수는 결론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사회화 사회통합과 공공성의 강화이다. 즉 최소복지체제와 안전망이 없는 한국의 경우 시장경제를 견제할 민주국가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반(半)직접 민주주의=반(半)대의민주주의로 참여와 제도, 운동과 정당의 상호 보완적 발전이다. 이는 곧 셋째, 국민주권(대의민주주의)과 인민주권(직접민주주의)의 융합과 통합접근의 필요성. 넷째, 선거연령의 하향조정. 다섯째 국민부(國民府) 설치를 통한 4권분립과 권력분립의 재구성. 여섯째, 권력구조 개편(반대통령제 및 권력분할)과 선거주기(의회-대통령임기 일치 및 중간평가),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비례대표 증대, 중선거구도입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세 가지의 동시개혁이란 대안으로 정리된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을 밝히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선 발표자들의 논의 자체가 흥미로웠다. 민주화 열망, 직선제 쟁취라는 단순한 구호로만 기억되는 87년체제를 각각 통치성과 체제 자체, 헌정체제의 문제를 통해 새롭게 조명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 했다. 또 보통은 의심해보지 않았던 '87년체제'를 각각의 관점을 가지고 세밀히 나누어 보고 있다는 점 또한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논평자들의 발언도 흥미로웠지만, 발표자들의 수준을 크게 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글 김현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재학중